



14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방위비 삭감운동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은 냉전 체제 종식에 발맞춰 방위비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완호 기자

방위비 줄여 사회복지로 돌려야 군병력 감축등 한해 2조절감 가능

여성단체연합모임 '방위비 삭감 토론회'

냉전의 종식 이후 바뀐 현재의 안보상황에 걸맞지 않게 비대한 방위비를 대폭 줄여 그 삭감분을 사회복지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여성단체연합회와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등 6개 여성단체들의 연합 모임인 '방위비 삭감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연대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개최한 '방위비 삭감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통일조국위원회 조임숙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중상위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총세출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4배 정도 많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중은 4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고 지

적했다. 조 위원은 이어 "그럼에도 군부를 비롯한 정치권력자들은 아직도 북한의 남침야욕과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군사력 열세와 같은 논리로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상적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뿌리깊은 군사정권의 잔재로 아직까지 성역으로 남아 있는 방위비 삭감을 위한 대중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김정수 연구원은 '방위비 삭감의 현실적 모색을 위한 시론'이란 주제발표에서 "방위비를 93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현재 남한 인구의 1.7%에 이르는 군 병력을 대부분의 국가처럼 인구의 1% 수준으로 감축하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한해 1조9천여억원의 방위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

정되는 커미션과, K-1 전차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비용 등 한국군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비리로 손실된 비용은 1조4천2백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비용 역시 삭감이 가능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유한성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의 방위비 지출은 국내 방위산업체들에게는 기술개발없이 중간마진만을 보장해주고 있을 뿐이며, 외국 방위산업체들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세대 노정선 교수(기독교윤리학)는 "방위비를 줄이고 국방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방위행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방위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방 정책 결정과정에 국회의원과 전문인사 참여 △국방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한국 주둔 외국군의 핵무기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찰권을 헌법에 명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안재승 기자